

보도시점

2026. 7. 6.(월) 14:00

배포

2026. 7. 6.(월) 09:00

7. 7.(화) 조간

농식품부,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 K-푸드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K-브랜드 완성

-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및 민간 투자·생태계 활성화, 외연 확장 등 「제1차 푸드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 발표

* 4대 도약(L.E.A.P) 전략 : ①(Local) 지역 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 ②(Empowerment) 핵심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 ③(Advancement) K-푸드테크 글로벌 영토 확장, ④(Pioneer/Platform) 미래 선도 기술 확보 및 규제혁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6일, 첨단 로봇 기술과 푸드테크 융합의 현장인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을 견인할 마스터플랜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푸드테크 독자 법률'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법정 기본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현장에는 첨단·융합·상생을 대표하는 푸드테크 선도 기업부터 청년 창업가, 투자기관, 학계 및 예비창업자 등 산업 생태계 구성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K-푸드테크의 미래 비전과 외연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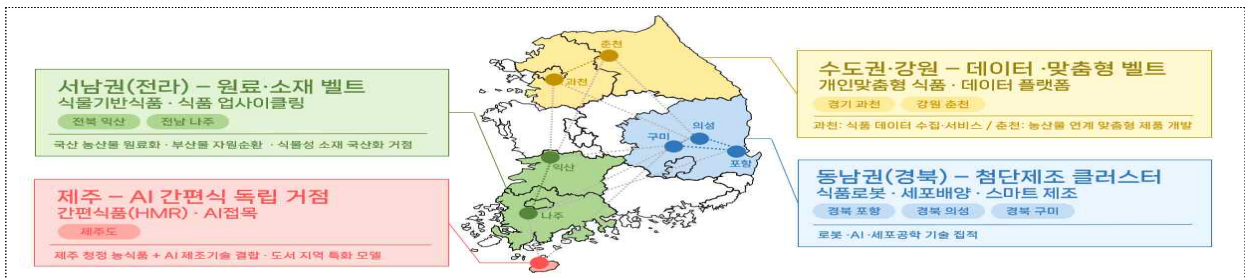
이날 송 장관은 행사장에 마련된 푸드테크 로봇 제품 시연을 참관하며, 식품 제조·외식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피지컬 AI' 등 최첨단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과거 정부 주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학·연 중심의 거점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주도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도약 전략(L.E.A.P.)을 제시했다.

① Local : 지역 주도 푸드테크 산업 기반 구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농식품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 정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 사례로, 포항의 경우 2026년말 완공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봇 앵커기업(뉴로메카 등)을 포함한 1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포항공대 계약학과, 로봇산업융합 연구원과 함께 현장 애로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도 현재 7개소에서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익산(콩), 나주(배박), 춘천(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푸드테크 기업의 원료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과 푸드테크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권역별 클러스터 전략 >



② Empowerment : 민간 생태계 기반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해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던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2026년부터 박사 과정까지 추가하여 10개 대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계약학과 도입 이후 재직자 교육 전후로 기업 매출이 약 1.8배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 효과가 입증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K-푸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창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며, 벤처연구팀의 기술사업화 교육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초기 창업자, 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혁신 성장펀드(2026년 300억 원 규모)와 세컨더리펀드(350억 원 규모) 조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책 펀드 조성 누적액을 2024년 510억 원에서 2026년 810억 원,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③ Advancement : K-푸드테크 글로벌 영토 확장 및 제조 혁신

전 세계적인 K-푸드 소비 열풍이 단순 식품 수출에 그치지 않도록, 기술·조리로봇·레시피·제품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수출 패키지 모델’(예시: 피자·비빔밥 조리로봇 + K-푸드 레시피)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현지 체험형 홍보 행사(로봇 조리 치킨 시식 등)를 확대하고, 국내외 박람회 내 ‘푸드테크 전용관’도 운영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식품제조업 전반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2024년 누적 30개소 → 2026년 187개소)한다. 지난 6월 출범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우리술, 전통식품 등 정책 분야별 AX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④ Pioneer/Platform : 미래 기술 선도 및 선제적 규제 혁파

아이디어 단계부터 투자연계형, 스케일업 자금까지 R&D 지원을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소규모 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R&D 투자를 늘려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분류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 DB를 구축하여 글로벌 표준 선도에 나선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신청제’를 도입,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다. 이미 감귤·배 착즙박, 맥주박 등 식품 부산물을 재활용(업사이클링)하여 플라스틱 대체 소재나 신소재를 만드는 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를 도출한 바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금은 기술과 레시피, 콘텐츠와 문화, 그리고 소비 경험이 하나의 플랫폼에 녹아들어 세계로 확산되는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라며, “푸드테크는 이러한 전환의 핵심 동력이자,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K-푸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K-브랜드를 완성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푸드테크의 진정한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되느냐에 달렸다”라고 언급하며, “우리 푸드테크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 펀드 조성 등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3개소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활성화할 민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장 미 (044-201-2126)



① [Local] 지역 주도 푸드테크 산업 기반 구축

- 5극 3특 성장엔진(전북: 푸드테크)에 따른 메가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 * 메가특구 연계 메뉴판식 규제특례(안): 세포배양식품용 축산물 등급 판정 예외 등

< '식품 로봇' 분야 혁신벨트 사례 (경북 포함) >

- 지방정부, 지역대학·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K-키친 프로젝트' 추진 중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26.10월 완공), 앵커기업(뉴로메카) 등 기업 10개소 유치, 포항공대(계약학과)·로봇산업융합연구원 등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기술컨설팅



-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26: 7개 → '30: 10개 목표) 인프라와 더불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패키지화
- 지역특화품목에 기반한 농업-푸드테크 연계*,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 * 푸드테크 기업에 국산원료(익산-콩, 나주-배박, 춘천-친환경 농산물 등) 안정적 공급, 장기계약 유도 및 이행체계 공고화

< 지역産 농수산물 활용 푸드테크 기업 사례 >

- 전용솥으로 간편하게 솔밥을 만들 수 있는 간편식품을 제조하는 A 기업은 제주산 나물과 해산물, 국산 쌀을 원료로 사용, EU·미국 등 수출 확대
-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원료 확보, 개별 농가와 계약 재배 확대 ('26~)



② [Empowerment] 지속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

- K-푸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쏠주기 지원, 벤처연구팀 기술사업화 확대
- * 기술사업화 교육 : ('25) 8개 과정, 83개 팀 → ('26) 9개, 90개 팀
- 계약학과 확대('25: 9개대, 석사 → '26: 10, 박사 추가)로 기업 수요 연계 전문인력 양성
- * 기업 재직자 대상 푸드테크 계약학과 교육 전후 매출액 약 1.8배 증가('21: 125억원 → '24: 229)

< 기술사업화 우수사례 (한양대학교) >

- 벤처연구팀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주파도터다) 및 특허출원(4건), 상표권 출원(2건) 완료
- '리틀모어 아르앤비타' 미국 수출 1만불, 클라우드 펀딩 24백만원 달성(달성률 4,768%)



- 모태펀드 등 활용, 예비·초기 창업자, 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미래혁신성장펀드('26: 300억원), 세컨더리펀드(350억원) 등 조성
- * 창업박람회, 투자교류회 등 정보제공을 통해 우수기업-투자자간 매칭 기회 확대
- *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누계): ('22~'23)310억원 → ('24)510 → ('26)810 → ('27목표)1,000

③ [Advancement] K-푸드테크 글로벌 영토 확장 및 고도화

- **K-푸드 패키지**(기술+제품+레시피) 등 융합형 수출 모델 개발·진출 ('26 하반기~), **비관세 장벽** 대응 인증 비용·컨설팅 등 지원
 - * 융합형 수출 모델(예시): 피자 조리로봇+K-피자 레시피 비빔밥 등 한식 메뉴+조리 로봇 제주 농산물 간편컵밥
- **스마트 공장**(중기부 협업) 등 스마트 제조혁신, 푸드테크 기술의 **해외 지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위조 단속 강화(지재처·외교부 협업)
 - * 식품제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누계): ('24)30개소 → ('25)100 → ('26)187
 - *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중기부 협업, '26.6월~): 민·관 협력 기반 식품제조업 AX 촉진 목적, K-푸드·우리술·전통식품·푸드테크·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정책 분야별 추진 계획
- **K-푸드 페스타**(10~11월) 및 국내외 박람회 푸드테크 전용관 홍보

④ [Pioneer/Platform] 미래 선도 기술 확보 및 추진체계 구축

- **R&D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소규모 기업이 참여 가능한 '**현장밀착형 R&D**' 등을 통해 신속 상용화에 집중
 - * 아이디어 단계 → 투자연계형(민간 투자유치에 매칭) → 스케일업(사업 고도화 자금)
- 푸드테크 **산업분류 코드체계** 마련('26~'27), 산업 실태조사·정보 DB 구축('28~), 해외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도록 **고도화**
- 육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능별 2~3개소), 정부-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푸드테크 규제개선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규제개선 신청제, '25.12.~), 농식품부 주도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여부 결정

< 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식품 업사이클링) >

- 폐기물로 관리되는 **농식품 부산물**(감귤착즙박, 배착즙박, 맥주박 등)을 **새활용**하여 플라스틱 대체 소재, 식품 원료 등 **新소재**를 만드는 **규제특례 적용**(루츠랩 외 10건), **폐기물관리법 개정**('26.하, 기후부)



□ 행사 개요

- **(목적)** 식품산업의 스마트화 및 외연 확장을 목표로 푸드테크에 기반한 글로벌 K-푸드의 비전과 전략 공유
- **(주제)** 첨단·융합·상생을 통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 AI·로봇 등 ‘첨단’ 푸드테크가 주도하는 K-푸드 미래 설계
 - 식품과 기술·문화·환경 등을 ‘융합’하는 푸드테크를 통해 K-푸드 외연 확장
 - 지역-K-푸드, 대기업-벤처·창업기업, 식품-기술 등 ‘상생’ 기반 푸드테크 육성
- **(일시/장소)** '26.7.6.(월), 09:30~11:30,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
- **(참석대상)** 식품 AX 제조 등 푸드테크 도입 기업, 청년·창업기업, 투자·인력양성 등 인프라 기관, 푸드테크 예비창업가(참관) 등 약 35명

□ 주요 안건

-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식품산업 정책방향 설명
- 식품·푸드테크 기업 기술·경영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 식품·외식 분야 로봇·첨단기술 활용 현장 점검